

### “미래세대 위해”...국제멸종위기종 큰돌고래 수입 불허 정당

이슈 판권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 등의 이유로 국제적멸종위기기종인 큰돌고래의 수입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양생물 전시나 돌고래쇼 관련 사업을 하는 A업체는 2017년 7월25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의 수입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신고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과 A업체가 타 국내수조관에 비해 돌고래 폐사율이 높은 점, 야생돌고래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야생으로 방류하고 있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해 수입

허가 거부 처분을 내렸다. A업체는 일부 전문가들이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이나 반입이 가능한 점, 과거에도 수입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큰돌고래의 개체군 변동 현황이 알려지지 않는 등 생존에 위협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포획 방법 자체가 매우 잔인하고, 수많은 개체가 희생되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은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거부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청이 종전에 A업체 등에 대해 큰돌고래 수입허가를 해준 사정만으로 자기구속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환경청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 판단에 기초해 광범위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 공유수면 매립 호화주택 지은 마을 이장... ‘눈 감아준’ 군청

#### 불법 석축 쌓고 2층 주택 지어...무안군 “용도 몰라 사용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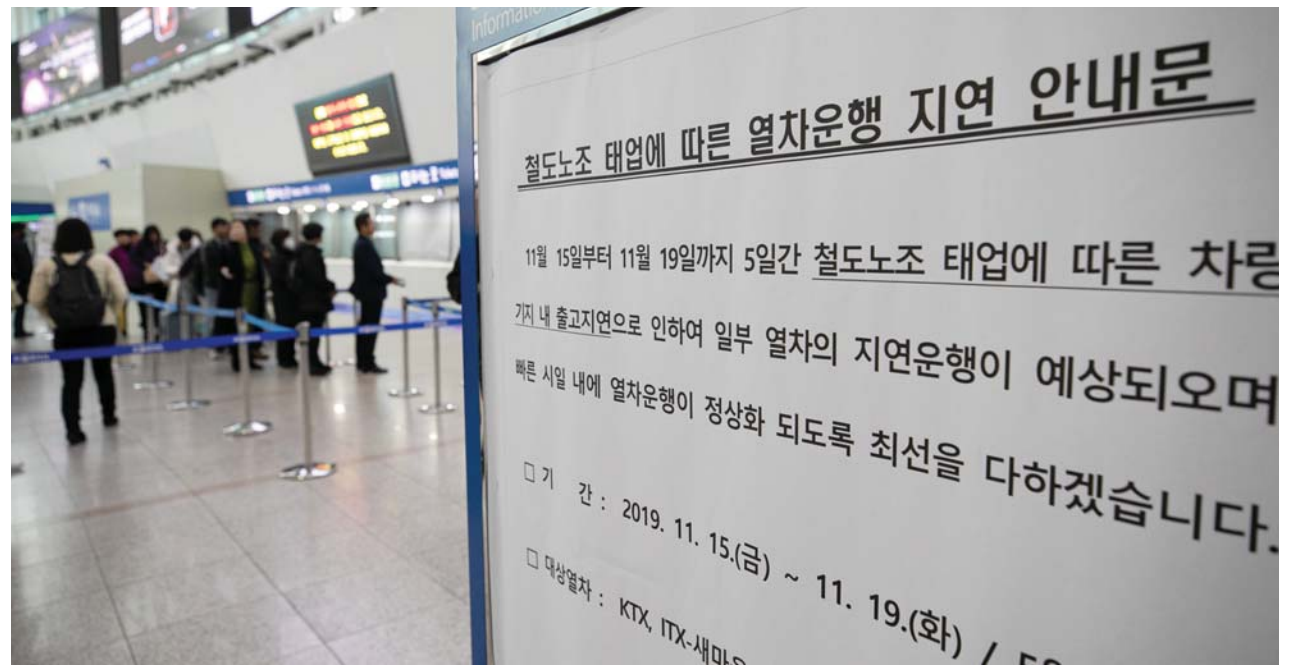


공유수면 100평을 불법 매립하고 석축을 쌓아 지은 무안군 삼향읍의 한 주택.

마을 이장이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해 호화주택을 지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지자체 인허가 부서의 특혜가 있었다며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장 A씨는 동네 바닷가 인접 임야를 매입해 2017년 10월말 주택을 완공했다. 건축신고서상의 A씨 주택은 대지 478㎡에 건면적 160㎡의 2층 형태로 지어졌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면서 바다와 인접한 석축이 허물어지고 바닷가 쪽으로 2~3m 밀리면서 석축을 다시 쌓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들이 무안군에 신고해 확인한 결과 해안가를 따라 48m에 걸쳐 높이 2.7m 석축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축이 밀리면서 생긴 공간에는

흙을 메워 자신의 주택부지로 포함시켰다. 무안군은 공유수면 100평(330㎡)을 무단점유한 것으로 확인하고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해당 주택이 완공되기까지 무안군의 허가 과정도 석연치 않다. 2017년 2월 건축신고 당시에는 공유수면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나 불허 결정이 난 사안이 그해 3월말 다시 신고 접수됐고, 이어 7개월만에 사용승인까지 났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 건축허가팀 관계자는 “당초 공유수면이 포함된 건축신고서가 접수됐으나 취하고 재접수된 신고서에는 공유수면이 제외돼 있어 접수 처리됐다”며 “이후 주택이 완공됐을 때도 건물은 공유수면을 침범하지 않았고, 당시 점유하고 있는 공유수면이 어떻게 사용될지 확인되지 않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줬

다”고 해명했다. 반면 공유수면 업무를 맡고 있는 무안군 연안관리팀은 “처음 건축부서에서 협의 요청이 왔을 때 허가불가와 함께 이미 토공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이후 건축이 계속 진행됐다”며 “결국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재해위험이 있어 원상복구를 면제하고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가 공유수면 100평을 자신의 집에 포함시키고 납부한 변상금은 고작 33만9770원이다. 또한 올해 납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54만4000원이다. 주민들은 공유수면 불법매립과 건축물 설치 혐의로 A씨를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하고, 올해초 무안군수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주민 B씨는 “그는 이장을 맡으면서 주민들의 사소한 일까지 걸핏하면 행정기관에 고발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경찰서에 여러 번 고소된 사람”이라며 “그런 데도 본인은 버젓이 불법을 일삼고, 군청은 이를 눈감아주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주택을 지으려 보니 공유수면을 침범했다고 해서 벌금도 300만원 받고 점사용료를 냈다”면서 “이장을 맡고 있는 동네 책임자로서 무질서한 부분에 대해 일부 주민들에게 주의를 줬는데, 오히려 저를 고발하는 등 해코지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철도노조 태업 “일부 열차 지연운행” 17일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승강장에 열차 지연운행 안내문이 보인다. 철도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준법투쟁(태업) 돌입해, 일부 열차가 지연운행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익산 장점마을 암 발병 22명?...“옆 마을까지 60명”

#### 환경부 “99명 중 22명 암 발병...14명 사망” 발표

#### 최재철 위원장 “사실 아냐...실제 거주 80명 중 33명”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에서 인근 (유)금강농산의 비료공장 때문에 수십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장점마을을 주변에 있는 마을까지 암 환자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뉴스1과 통화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암 발병 규모는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장점마을 환경부 역학조사 최종발표회에서 “장점마을에서 2001년 비료공장 설립 이후 2017년 12월31일까지 주민 99명 중 22명에게 암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장점마을에서만 암 발병이 33명이고 인근 마을까지 포함하면 60명가량이 암에 걸렸다”고 반박했다. 그는 “환경부 조사 방법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환경부가 주장하는 주민 99명은 주민 등록상 주민일 뿐 실제 주민은 약 80명이고, 2018년 1월1일 이후 암에 걸린 사람이나 암으로 죽은 사람은 환경부가 역학조사 근거로 삼은 암센터에 등록되지 않아 환경부 통계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사와 달리 실제로는 약 80명의 주민 중 40% 정도인 33명이 암에 걸렸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17명이 사망했고, 16명이 투병 중이라고 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지만 실제로는 재앙 수준으로 비료공장 주변 마을들이 암 공포로 떨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환경부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환경부는 역학조사 최종발표회를 통해 “장점마을 주민 뿐만 아니라 주변 오염물질 노출 가능 지역 주민에 대한 추가 파악 및 의료지원과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 관련 건강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질병감시와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암 공포에 떨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 오고 있고, 우리 마을에서도 추가로 3~4명이 ‘암에 걸리지 않았나’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우선 비료공장과 가까운 5개 마을 정도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네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조기발견, 자립치료 중인 민척군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h-well 국민건강보험 | 고령센터 1577-1000 |